



[산업] '창립 66주년' SK 선경직물서 시작한 행복날개 05



Economy

코스피	2209.61 (0.00)	코스닥	751.71 (0.00)
금리 (연이자율)	1.74 (+0.02)	환율 (1달러)	1136.60 (+0.30) (5일)



7일 오후 강원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마을에서 통신사 관계자가 통신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 특별재난지역 지정 재계도 적극지원 나섰다

성금·생필품 등 전방위 지원

국내 기업들이 지난 4일 큰 불로 타격을 입은 지역민들을 위해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자처했다.

7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를 비롯해 주요 그룹사들은 거액의 성금을 출연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다양한 창구로 전달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8면>

삼성전자가 단연 가장 많은 20억원을 내놓은 가운데, 현대차와 SK, LG, 롯데가 10억원을 마련했다. 현대중공업그룹도 1억원을 내놨다.

사업 특성에 따른 기업별 차이도 눈에 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구호소에 가전을 지원하고, 이재민들에게는 무료 점검을 해주기로 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무전기와 임시 기지국 설치 등 활동에 나섰다.

현대차는 하루 1000kg 세탁물을 처리하는 도시형 세탁구호차량 3대를 제공한다. 무료 점검 및 수리비 50% 할인 혜택도 약속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사고 지역 복구를 위한 중장비들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유통업계는 실물 지원을 결정했다. 텐트와 담요 등 구호키트와 생필품, 간편조리식과 빵, 식수 등을 제공한다. 현지 유

통망을 활용해 사고 즉시 지원을 펼쳤다.

공통점은 실물뿐이 아닌 전방위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 기업들은 성금과 물건 외에도 봉사자를 현장에 파견한 상태다. 삼성은 의료진들을 보내 이재민들 건강을 살피기로 하는 등 다양한 도움을 준비 중이다.

한편, 정부와 여당도 강원도 산불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월 임시국회 제출 예정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강원도 산불 피해복구 관련 예산을 포함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당정은 1조8000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를 재난대책비에 최대한 활용하되, 추가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추경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피해 주민들을 직접 지원하는 것뿐 아니라 지역 인프라 복구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등 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 제 등 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만큼, 정부는 이 지역 인명피해 구호금 및 이재민 생계비 등에 재난대책비를 투입할 수 있다.

/김재용 기자 juk@

회계시장에 부는 M&A 바람 대형화 통해 투명성↑ '빅4 위협'

당국, 회계감사 강화 위해 11월 감사인 등록제 시행 중소 회계법인 합병 유도 감사 품질 비효과 지적도

정부가 기업의 회계감사를 강화하기 위해 회계법인 대형화를 유도하고 있지만 중소회계법인의 합병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11월부터 등록 공인회계사 40명 이상 회계법인만 상장기업 외부감사를 맡도록 한 감사인 등록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3면>

중소 회계법인의 합병을 유도해 기업 회계 감사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따라서 회계법인이 생존하기 위해선 몸집을 불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기존 대형회계법인 등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회계법인과 전문가는 회계법인의 대형화가 곧 감사품질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필요하다. <관련기사 3면>

7일 공인회계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합병이 성사된 중소 회계법인은 총 4곳으로 집계됐다. 합병된 법무법인은 한길회계법인(한길+두레, 한길+성신) 회계법인 상지원-대안(상지원+대안), BOD성도이현회계법인(성도+이현)이다. 회계법인의 12월결산법인 감사 업무가 끝나는 3월 말부터 합병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아직 잠잠한 상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위해 지난해 외부 감사규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금융위에 등록된 회계법인이라면 어디든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40명 이상 등록회계사를 보유하지 않으면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또 회계법인을 회계사 규모에 따라 5개군으로 분류해 각 군에 맞게 외부감사를 맡게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을 기준으로 5조원 이상(가군), 1조원 이상 5조원 미만(나군), 4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다군) 등으로 분류하고, 회계법정도 회계사 인력(주사무소 기준)이 600명 이상이면 가군, 120명 이상이면 나군, 60명 이상이면 다군 등으로 분류했다. 당시 금융위는 "회계법인 영업력이 아닌 감사품질 중심의 조직화 필요하다"며 "회계법인 대형 조직화를 추진한

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소회계법인 안팎에 선 회계법인의 대형화는 기존 대형법인의 영업력을 합리화시키는 요인일 뿐이라며 곧 감사 품질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한공인회계사는 "중소회계법인은 회계사가 20~30명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회계사마다 의견도 달라 합병을 하는 것도, 합병을 하더라도 회계사 인력이 대형법무법인에 비하면 한참 부족해 경쟁에서 밀릴게 뻔하다"며 "수익이 불확실한 투자를 굳이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품질을 위해 인원 수로 규제하는 것은 기존 대형 회계법인 외에는 감사하지 말라는 얘기와 다르다"고 했다.

<지정감사인 등급 기준 개선안>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법인	구분기준					총족해야할 기준의 수 (총족회계법인수)
	주사무소 등록회계사	감사부문 매출	품질관리 담당자수	손해배상 능력	상장사 감사실력	
가	600인 이상	500억원 이상	상장사	200억원 이상	100사 이상	4개 총족(4)
나	120인 이상	120억원 이상	감사인에 요구되는 120%	60억원 이상	30사 이상	4개 총족(5)
다	60인 이상	4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10사 이상	4개 총족(13)
라	30인 이상	15억원 이상	2명 이상	10억원 이상	5사 이상	3개 총족(44)
마	감사인 지정이 가능한 그밖의 회계법인 (109개)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아직 잠잠한 상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위해 지난해 외부 감사규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금융위에 등록된 회계법인이라면 어디든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40명 이상 등록회계사를 보유하지 않으면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또 회계법인을 회계사 규모에 따라 5개군으로 분류해 각 군에 맞게 외부감사를 맡게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을 기준으로 5조원 이상(가군), 1조원 이상 5조원 미만(나군), 4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다군) 등으로 분류하고, 회계법정도 회계사 인력(주사무소 기준)이 600명 이상이면 가군, 120명 이상이면 나군, 60명 이상이면 다군 등으로 분류했다. 당시 금융위는 "회계법인 영업력이 아닌 감사품질 중심의 조직화 필요하다"며 "회계법인 대형 조직화를 추진한

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소회계법인 안팎에 선 회계법인의 대형화는 기존 대형법인의 영업력을 합리화시키는 요인일 뿐이라며 곧 감사 품질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한공인회계사는 "중소회계법인은 회계사가 20~30명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회계사마다 의견도 달라 합병을 하는 것도, 합병을 하더라도 회계사 인력이 대형법무법인에 비하면 한참 부족해 경쟁에서 밀릴게 뻔하다"며 "수익이 불확실한 투자를 굳이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품질을 위해 인원 수로 규제하는 것은 기존 대형 회계법인 외에는 감사하지 말라는 얘기와 다르다"고 했다.

실제로 등록회계사수 600명 이상, 감사부문 매출액 500억원 이상의 기준을 충족한 회계법인이 가군의 대형 회계사를 감사할 수 있는데 이 기준에 충족되는 회계법인은 4대 회계법인(삼일·

삼정·안진·한영) 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품질을 위해 대형화를 추진하더라도 기존 대형회계법인만이 감사로 지정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임태균 전북대 회계학 교수도 회계학연구회를 통해 "4대 회계법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회계 감사 인프라에 대한 투자비용이 커 회계감사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고, 그 외 회계법인은 다년간 근무한 회계사가 일정수준의 경험을 통한 감사 품질을 달성하고 있어 감사 품질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무조건 4대 회계법인이 그 외 회계법인에 비해 감사품질이 좋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제한적인 감사인 지정제도 하에서 규모가 큰 회계법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현행 감사인 지정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2020년 적용될 감사인 지정방식을 공정하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우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현대차 노사 '위기극복' 맞손... 팰리 40% 증산

(팰리세이드)

44년 만에 첫 영업손실 기록 노사 손잡고 실적반등 드라이브 팰리세이드 증산에 노조 합의

현대자동차 노사가 손잡고 실적 반등에 드라이브를 건다. 이는 회사가 지난 1974년 상장 후 44년 만에 처음으로 영업손실(적자)을 기록하자 노사가 이견을 좁히고 돌파구 마련에 나선 것.

7일 금융감독원에 공개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해 해외법인과 자본법 평가 손익을 제외한 별도 재무제표 기준 593억2000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현대차 본사의 지난 2017년 영업이익은 2조 1634억원, 2016년 영업이익은 2조 6995억원이었다. 이는 최근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등 신기술 관련 연구개발(R&D) 비용이 증가한 데다, 원화 강세로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노사간 갈등으로 발생한 노조 파업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 노조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파업(약 138일)했고 9조 30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지난 2017년 노조는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기록적인 파업을 진행함에 따라 지난해 구형 차량 약 3만대의 재고가 발생한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임단협이 타결된 후에는 신차가 출시되면서 생산 물량의 판매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각종 악재로 현대차가 지난해 영업손실을 기록하자 올해는 노조의 모습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우선 지난달 정부의 '노동법 개정'에 반발해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진행했지만 현대차 노조는 파업에 불참을 선언했다. 또 현대차 노조는 흥행 대박으로 주문 적체로 시달리고 있는 대형 SUV(다목적 스포츠차량) '팰리세이드' 생산을 늘리는데 합의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팰리세이드의 월 생산대수는 6240대였으나 이달부터 8640대로 40% 늘리기로 합의했다. 이미 지난 1일부터 생산량을 상향 조정했다. 그동안 현대차 울산 4공장에서

팰리세이드와 스타렉스를 1대 1 비율로 만들었지만, 이제 3대 1 비율로 팰리세이드 비중이 높아진다.

현대차가 실적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인기 차량의 생산을 늘려 함께 회사의 위기를 극복하자는 노사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올 하반기부터 실적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해까지 미래차 대응(자율주행, 커넥티비티, 공유경제)을 위한 외부 인사 영입도 적극 추진해 안정적인 상황이며 대규모 비용을 투자해 개발을 완성한 신형 쏘나타와 팰리세이드가 출시된 만큼 R&D 비용 부담도 줄어든 상황이다. /양성운 기자 ysw@